

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제안… 자사주 보유량의 5배 필요

보유 자사주 163만주에 그쳐
PS 절반 지급 땀 최대 950만주
부족분 메우려 추가 매입 불가피
주주환원책과 재원 배분 맞물려
기준가·주총 승인·노조 반발 변수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 물량 확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보유 자사주는 발행주식의 0.2% 수준에 그쳐 매년 대규모 매입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주주환원 정책과도 자사주 재원이 맞물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난 5월 13일 공시 기준 보통주 163만 448주다. 발행주식의 0.2% 수준이다.

성과급 재원은 이를 크게 웃돈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삼기로 하고 기본급 1000%인 지급 상한을 폐지했다. 이 기준은 10년간 유지된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98조 152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증권가가 전망하는 연간 영업이익 250조원을 적용하면 재원은 250조원 규모다.

절반을 주식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물량은 730만~950만주에 이른다. 보유 자사주의 5배 가량이다. PS 재원 25조원과 주식 지급 비중 50%를 전제로 최근 주가를 적용한 추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임단협에서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추가 매입이 병행된다고 부연했다.

자사주 성과급 자체는 전례가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임직원 상여금 지급용으로 자사주 45만1015주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물량은 이번엔 거론되는 규모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재원이다. 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사주 1530만주 소각은 유동 주식수를 줄여 주주 지분 가치를 높이는 조치인 반면 성과급용 매입분은 임직원에게 지급돼 소각 대상에서 빠진다. SK하이닉스는 2025~2027년 주주환원 정책에서 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성과급 지급과 주주환원 정책을 형상화한 생성형 AI 이미지.

당 고정배당금을 1500원으로 올려 연간 배당 총액을 1조원 규모로 잡았다. 성과급 재원의 25분의 1 수준이다. 김우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4월 콘퍼런스콜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추가 환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사주 활용 방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준가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도 변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장중 298만7000원까지 올랐다가 30일 132만 2000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재원이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필요 주식 수가 두 배 이상 벌어지지만 교섭안에 기준가 산정 방식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상 관문도 남아 있다. 개정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내 소

각하도록 하되 임직원 보상 등 예외 목적의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획을 위반해 처분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7일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108만주를 처분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안만 보고 주주이익 침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아차피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주주가 반대한다면 주총에서 부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4일 청주캠퍼스에서 임단협 5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PS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안과 함께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 조정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메모리 업황의 변동성을 이유로 들면서다. 반면 노조는 지난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정안이 없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합의 1년도 안 돼 지급 방식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직원 A씨는 “1년도 안 돼 합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정부도 기준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성과급과 공장 신설 기업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으로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만들고 있다. 전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하며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만 가지고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급 결정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과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노동부 지침과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기준이 정리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부동산 세제 여파 점검… “전월세·청년 주거 면밀히 살필 것”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정례화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정정 부상
정부 공급안 발표 후 후속 논의
오세훈 시장에 주택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여파를 진화하기 위해 향후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강서병) 의원과 남인순(송파병)·진성준(강서을)·오기형(도봉을)·김영배(성북갑)·이용선(양천을)·최기상(금천구)·김남근(성북을)·채현일(영등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



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나 “(부동산 세제개편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입법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책이 필요할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 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 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급의 광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장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 여부 논의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원도 일부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내주에도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모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서울 아파트 78주째 상승… 강북·외곽이 끝났다

매매가 0.26% 올라 상승폭 확대
중랑 0.52%·성북 0.49% 상승 주도
전셋값도 0.25% 올라 동반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일 기준 0.09%,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은 한 주간 0.26% 올랐다. 지

난해 2월 첫째주 이후 78주 연속 상승했으며, 전주(0.25%) 대비 상승폭도 커졌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 부담이 덜한 자치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0.52%)는 신내·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49%)는

돈암·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46%)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금천구(0.32%)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0%)는 개봉·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0%)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다. 상승률은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3%, 0.16%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한 주간 수도권

과 서울이 각각 0.19%, 0.25%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역시 강북과 외곽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북구의 상승률이 0.49%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가 0.42%로 그 뒤를 이었다. /한성미 기자 smhm@



metro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7월 27일 8월 3일 단위: %

